

GLOCALISM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

Empowering Sustainabl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 Administration



김영환의 지방시대
충청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GOVERNORS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LOCALISM



김영환의 지방시대

충청북도지사

GLOCALISM

MAGAZINE *about Chungbuk*

2023. DECEMBER Vol. 112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

01

김영환의 지방시대

지방시대란
지방이 중심이 되어 규제혁파를 통한
개혁과 혁신을 선도하고, 특색있는
지역발전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드는 시대이다.

09

충청북도 지방시대 정책우수사례

- 11.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세계 배터리산업의 중심, 충북
- 13. 사통발달 철도교통의 중심
충북 의료비 후불제 시행
- 14.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1등 충북
- 15. 추억공유 영상자서전
어쩌다 못난이 김치
- 16. 충북형 도시농부

17

충청북도 주요 정보

- 19. 충북의 주요 관광지



23

글로벌 이노베이터를 찾아서 충청북도 편

(주)이김 유민 대표

31

지방시대, 프랑스 편 · 스웨덴 편

- 31. 2022년 프랑스 출산율 1.80, 그 내막 깊이 읽기
- 41. 스웨덴의 출산 지원 정책

49

지방시대, 중앙정부 정책동향

2024년 조세정책의 기본 방향

“

지방시대란
지방이 중심이 되어
규제혁파를 통한 개혁과
혁신을 선도하고,
특색있는 지역발전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드는 시대이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



김영환의 지방시대

지방시대란
지방이 중심이 되어 규제혁파를 통한 개혁과 혁신을 선도하고, 특색있는 지역발전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드는 시대이다.

우리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극복을 위해 지난 30여 년간 끊임없이 지역발전정책,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역균형정책 등 추진해 왔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소멸, 인구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만의 생존 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번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목표 중 하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중앙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과거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으로 지방시대가 좀 더 속도감을 낼 수 있게 되었다.

위기의 지방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전략과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 스스로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 문화예술 기반 강화, 인재육성, 기업이전 등 지방정부 주도의 역량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

해안에서 내륙으로 중부내륙시대의 개막을 알린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바다 중심, 항구 중심, 해안 중심으로 급속히 발전해 오며 따라 내륙지역은 각종 정부정책에서 소외되며 점차 낙후되고 지방은 소멸할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구소멸 및 낙후 지역발전을 위한 추가적 정책지원과 자립적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내륙지역의 호수, 백두대간 등 자연환경과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인프라를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제창출하기 위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특정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을 담고 있고, 내년 총선 일정 등으로 인해 제정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그동안 법안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부처 설득과 법안 수정, 토론회 및 세미나 등 입법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100만 명 서명운동은 단기간 내 1,075,599명이 참여, 107.6%라는 기록을 달성하였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 제정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발상의 전환을 통한 기존 자원가치의 재발견하다.

충북은 충주·대청댐을 통해 수도권과 충청권 주민 3천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충북도민은 40년 넘게 규제에 묶여 10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하루 1,239만 톤의 물을 만들어 수많은 산업단지에 공급하고 있지만 충북 기업들은 물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더욱이 대한민국 최고·최대 국가정원인 청남대(55만평, 청와대 7배 규모)는 200톤의 오수정화시설이 갖춰져 있음에도 중첩된 규제들로 인해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설치는 물론 간단한 식사와 커피 한잔도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민선 8기 김영환 지사가 취임하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한 기존 자원의 가치 재발견'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여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역점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충북은 바다는 없지만 호수가 있고, 항구는 없지만 백두대간이 있으며, 뱃길은 없지만 세계로 난 만 갈래길이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기본 토대가 되어 최근 수도권 일극화 방지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충북을 중심으로 한 내륙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레이크파크'란 호수 뿐만 아니라 충북 미래 100년 발전을 위해 새롭게 시도하면서 재발견해야 할 자원을 총칭하는 함축적인 표현이며, '르네상스'는 레이크파크 위에 창조적 혁신을 더해 「더 살기 좋은 충북」을 만들어 가는 대변혁·대혁신의 과정이다.

2023년 3월 15일,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비전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가속도를 높이기 위해 김영환 지사가 직접 정책의 본격적인 시작을 대내·외에 알렸다. 중부내륙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비전으로 수립된 추진전략은 레이크 파크(水), 마운틴 파크(山), 시티 파크(人)로 분류되는 3대 분야별 전략사업(15개 과제, 2조 6,350억 원)과 대청호권(17개 소권역), 충주호권(12개 소권역), 괴산호(16개 소권역)으로 분류되는 3대 권역별 중점사업(333개 과제, 6조 8,518억 원) 등 총 348개 과제 9조 4,86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수익을 내는 단순한 사업의 개념이 아닌,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충북만의 고유 브랜드이며 충북의 정체성과 가치를 바로 세우는 토대로 충북의 환경을 지키고 충북의 물과 산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충북 환경을 지키고 충북 100년 먹거리를 마련하여 충북도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충북의 정체성과 가치를 바로 세우다.

새로운 충북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고 충청북도의 비전과 정체성을 찾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청북도의 새 이름(BI) '중심에 서다'와 새 얼굴(CI) '츠비'를 선포했다.



충청북도의 새로운 심벌마크

충청북도 새 이름(브랜드 슬로건, BI) '중심에 서다'는 충청북도가 지리적 위치, 사회 전 분야, 국내외 위상 등 모든 곳·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중(中)과 심(心)이 합쳐져 충(忠)북을 이룬다는 충청도 고유의 정체성을 표현했다.

25년만에 교체된 충청도 새 얼굴(심벌마크, CI) '츠비'은 좌우대칭인 형태와 함께 충북을 이루는 각 분야가 중심을 향해 균형감 있게 뻗어나가며 성장하는 충청북도의 미래 비전을 구현하였으며

'치웃'과 '비읍' 사이의 화살표는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비상하는 충북의 위상을 형상화하고, 11개 획은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닌 충북의 11개 시·군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소통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선포와 함께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뻗어나가며 성장하는 충북으로 거듭날 것이다.

마주보는 도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다

수년간 도청사 구석에 방치된 채, 문서고로 활용되거나 기타 업무공간으로 활용되었던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인 산업장려관 1층은 원색의 활기차고 트렌디한 인테리어로 꾸며 장애인 직업재활 카페로 탈바꿈하고 2층은 다양한 전시가 진행되는 문화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초록색



우레탄 방수로 아무도 이용하지 않던 청사 옥상이 푸른색 잔디밭으로 펼쳐져 다채로운 식물들과 아름다운 꽃들로 둘러싸여 하늘정원으로 바뀌고 도청을 둘러싼 90m 담장 안 정원을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담장을 허물어 잔디광장으로 변화되었다.

담과 우거진 나무들로 둘러싸여 권위적이었던 도청사가 도민들을 위해 휴식하며 힐링하는 공간으로의 재탄생은 작은 변화일 수 있다. 하지만 수년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변화는 민선 8기에서 과감하게 실행되었다. 이런



변화는 “마주 보는 도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겠다”라는 김영환 도지사의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이다.

패러다임의 변화, 대한민국 중심을 꿈꾸다

지난 7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여 새로운 지방시대 본격 출발을 알렸다.

김영환 도지사는 충청북도 도지사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 생각하지 않고 충청북도 지방정부의 수장이라 생각하며,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닌 지방정부로써 우리

지역만의 올바른 정책을 수행하고 개혁 모델을 만들어 중부내륙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건설하고자 노력한다.

지금 충청북도는 지방시대 출범과 함께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담대한 도전과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충북이 가진 규제 완화와 가치의 재발견을 통한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정책을 추진한다.

하지만 충북의 모든 정책은 충북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개혁의 테스트베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선도적으로 앞장서겠다.



<충북 대청호의 모습(용의 승천) / 구글어스(Google Earth)>



과감한 개혁과
혁신의 충북,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중심을
꿈꾸다.

충청북도 지방시대 정책우수사례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세계 배터리산업의 중심, 충북
사통발달 철도교통의 중심
충북 의료비 후불제 시행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1등 충북
추억공유 영상자서전
어쩌다 못난이 김치
충북형 도시농부

산·학·연·병
집중을 통한
K-바이오 스퀘어
조성



1994년, 정부의 보건의료과학기술 혁신방안 수립과 함께 바이오의 불모지였던 충북 오송에 국가 유일 생명과학단지인 오송 생명과학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충북 바이오산업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그 결과 동종 사업 종사자 수 3위, 바이오산업 국내 판매 및 수출 규모 3위(2021년 기준, 한국바이오산업정보서비스 출처)라는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충북은 국가 간 글로벌 첨단바이오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 바이오 대전환 시대를 맞아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적인 지원이 필요, 한국형 캔달스퀘어 프로젝트인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조성사업'을 계획했다.

2023년 6월 1일 정부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에 기업·대학·연구소·병원 등이 집적되어 바이오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 예정인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조성사업'이 반영되고, 생명공학분야 최상위 법령 계획인 국가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및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 계획에 연달아 반영되었다. 이로써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은 충북 바이오클러스터를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로 육성하여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발전은 물론, 특색있는 지역발전 및 지방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배터리산업의
중심으로 비상하는
충북

충북의 이차전지 주요 산업지표는 전국 최상위권으로, 이차전지 생산액은 '21년 기준 14.9조원, 수출액은 '22년 기준 25.1억달러로 각각 전국 1위이며, 이차전지 산업종사자는 11,129명으로 전국 유일하게 만명이 넘으며 전국 대비 비중의 37.2%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태동과 성장을 함께 하며 누구나 인정한 대한민국 이차전지 1등 지자체 충북은 국내 전기차 배터리생산능력(155Gwh) 1위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셀 제조사)을 비롯하여 국내 대표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 등 소재 기업과 부품·장비 및 팩/모듈 제조 기업, 그리고 응용제품 및 활용

기업 등 128개 기업이 재료-소재-셀-팩/모듈-응용제품-활용에 이르는 완결형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다.



충북은 이러한 국내 최대 규모 배터리 생산을 기반으로 이차전지 테스트 인프라를 한 지역 내에 집적화한 BST-ZONE*(Battery Safety Testing Zone)을 조성 중이다. BST-ZONE은 소재-셀-모듈·팩의 전주기 R&D·사업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충북은 민간기업 주도로 구축 중인 배터리 신모델 시생산 테스트 라인과 R&D 센터** 구축 지원,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등과 연계 특화단지 내 첨단기술 집약형 연구 및 실증 인프라 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차세대 이차전지 선도를 위한 혁신 역량을 집적화하고 있다

금년 7월, 충북도는 미래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공을 들여 추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서 오송과학산업단지 일원 4개 산업단지(약 442만평)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21년)'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23년)'를 동시에 지정받은 지자체가 되었다.

충북도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로 선도기업 중심의 세계 최고의 이차전지 기술 집약형 첨단전략산업 단지를 구축하여 급성장하는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IT), 대만 과학산업단지(반도체)와 같은 세계적인 이차전지 클러스터 충북을 육성할 계획이다.

*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시험분석 센터, MV급 환경신뢰성 평가 센터 등
** LG에너지솔루션 마더라인 및 팩토리 모니터링 컨트롤센터(FMCC), 에코프로 R&D캠퍼스

**지방 시대 발전을
견인하는 사통발달
철도교통의 중심**



그동안 부단히 노력해 왔던 164만 충청도민의 염원인 광역철도 청주도심통과 노선이 지난 6월 확정되어 충북은 대전 및 세종과 30분대의 생활권을 만들어 인적·물적 교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하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광역생활경제권을 형성, 지방시대 성장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다.

또한, 최근 KTX 이용객이 10억 명을 돌파(23.8월)하는 등 고속철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착공식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수도권 중심에서 탈피하여 지방으로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하여 지역민들의 생활권 확대, 관광객 교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 대한민국 교통과 물류를 책임지는 고속철도의 요충지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전국 최초 신개념
의료복지 제도,
'충북 의료비
후불제' 시행**



충북은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의료접근성 강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의 재정적 부담을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출생 증가율 전국
1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1등
충북' 실현**

도민 건강 회복을 지원할 신개념 선순환적 의료지원제도인 '충북 의료비후불제'를 시행 중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의료비후불제는 의료취약계층(65세 이상 고령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14개 질환(임플란트, 심·뇌혈관, 슬·고관절, 척추 등)으로 수술 및 시술을 받을 경우 50~300만 원 한도 내 의료비를 용자지원하고 무이자로 36개월 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타 지원제도를 받고도 의료비가 부담되거나, 지원조차 받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의료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고 도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023년 1월 9일 시행 이후 의료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운영상 문제점 등을 지속 확인하여 대상자격 확대, 신용확인 절차 개선 등 수혜자 편의 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도내 의료취약계층이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2년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역대 최저인 0.78명으로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인구감소 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충북 역시 초고령사회에 돌입한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 상황이 유지된다면 자칫 충북이 사라질 수도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민선 8기 김영환 도지사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1등 충북' 실현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인구정책 확대를 통한 출생률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충북은 자녀 양육에 있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민선 8기 대표 공약으로 출산육아수당 1천 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23년 이후 출생한 도내 모든 신생아 가정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수당은 5월 제도 시행 후 불과 한달 만에 도내 전체 신생아 출생 가정의 99.6%가 신청하는 등 전폭적인 관심은 이미 입증되었다.

지난 3월 김영환 지사는 삼일절 기념사를 통해 "아이를 낳는 일이"에국 독립운동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출산 장려와 육아 정책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임신부 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와 임신부 및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사회의 그릇된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약칭:임산부 예우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충북도의회 심사를 거쳐 전국 최초로 내년 1월 공포 예정인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이야기 플랫폼 구축

‘임산부 예우 조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임신 출산 친화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은 도민의 삶의 애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보존하는 영상자서전 사업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추진, 최다 영상자서전을 촬영하여 유튜브(YouTube.com) ‘충북영상자서전’채널을 통해 게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영상의 촬영을 넘어 영상 아카이브 구축과 온라인 플랫폼 공개를 통해 도민의 인생을 기록문화 유산으로 남기는 충북도만의 유일한 문화유산 운동으로 각종 기관·단체, 보훈단체, 청년 등 각계·각층의 협조와 참여로 추진되고 있으며 복지관 및 시군 평생학습관을 통해 전문적인 영상편집과 SNS 활용교육을 수료한 뒤 ‘시니어 유튜브’, ‘인생기록사’ 등 영상자서전 크리에이터로서 영상자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충북도는 배추 주산지로 재배면적은 2,928ha, 생산량은 209,577톤으로 전국 4위, 가을노지 배추는 전국 2위이다. 2022년 가을, 배추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면서 배추 판매가격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자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함에 따라 충북도는 도내 배추재배 농가의 판로 확보를 돕기 위해 지역의 김치 제조업체들과 농가를 직접 연결하여 김치를 생산하면 도가 홍보·판매를 적극 지원하는 ‘충북 어쩌다 못난이 김치’ 사업을 추진했다. 품질은 정상이지만 가격이 폭락해 어쩌다 못난이가 되어버린 배추를 활용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대를 위해 시작한 못난이 김치는 이후로도 그 취지와 가치를



공정과 상생의 가치, ‘충북 어쩌다 못난이 김치’

살리기 위해 충북 김치 브랜드로 발전시켜 연중 생산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는 김치의 양은 연평균 74만 9천 톤으로 이중 수입산 비율은 37%(27만 7천 톤)에 달한다. 특히 외식업체의 40%는 수입산 김치만 사용하고 국내산과 혼입하는 업체까지 고려하면 10곳 중 7곳이 수입산 김치를 사용한다.

충북도는 못난이 김치 생산과 발맞춰 수입산 김치 대신 착한 가격의 국산 김치로 우리 식탁을 건강하게 지키고 농민과 농업을 보호하자는 ‘김치 의병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못난이 김치뿐만 아니라 국산 김치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산농산물로 만든 저렴한 가격의 못난이 김치를 전국 외식업체에 공급하기로 해 현재까지 전국 600여 개 외식업체에 못난이 김치를 꾸준히 공급하고 있으며 못난이 농산물 품목을 고추, 감자, 옥수수 등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도-농 상생형 일자리 사업!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2022년 충북도 농가인구는 152천 명으로 2018년 164천 명 대비 7.3% 감소하여 농업의 노동력 확보가 절실한 것과 달리 도시는 은퇴자, 주부, 청년 등 유희인력이 점점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와 도시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도-농 상생형 일자리 사업인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농부 사업은 74세 이하의 은퇴자, 주부, 청년 등 유희인력을 농업, 농촌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한 후 일손이 필요한 농업현장에 4시간의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북도는 도시농부 사업을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난을 극복하고 있으며 도시 유희인력을 농촌으로 끌어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농촌노동력을 내국인력으로 대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여행이
즐거워지는 곳!
충청북도



충청북도
주요정보

충북의 주요 관광지

충북의
주요 관광지

청남대



남쪽에 있는 청와대라는 뜻의 청남대는 1983년부터 20여 년간 대한민국 대통령의 휴양지로 이용된 곳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본관, 오각정, 골프장, 양어장, 초가정 등이 있으며, 대통령 생활상을 체험하는 대통령역사문화관, 옥상텃밭인 하늘정원 그리고 연인과 대청호반을 따라 거닐 수 있는 아름다운 호반 산책로가 있다. 2023년은 청남대 개방 20주년이 되는 해로 재즈페스티벌, 반고호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청남대는 한국관광공사 주관의 2023년 코리아 유니크 메뉴에 선정되어 한국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MICE 시설로 인정받기도 했다.

중앙탑 사적공원과 탄금호 무지개길



중앙탑 사적공원은 탄금호와 맞닿아 있어 공원과 넓은 호수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으로 2013년 조정 세계선수권 대회를 이곳에서 개최하였다. 공원 내에 체험장소(사진관, 의상실, 자전거대여소 등)를 갖추어 방문 관광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중앙탑사적공원은 '문화재와 호반 예술의 만남'이라는 테마를 가진 야외 조각공원으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과 『빈센조』의 촬영 장소로도 유명하다. 갖가지 조명이 켜지는 밤에는 공원 일대의 분위기가 마법처럼 뒤바뀐다. 빛을 받으며 우뚝 선 중앙탑 역시 단아하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정갈하게 만든다. 중앙탑 옆으로 길게 이어진 탄금호 무지개길은 탄금호 주위를 걷는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유명하다.



01. 청남대
02. 중앙탑과 탄금호 무지개길

제천 청풍호반 케이블카



청풍면 물태리에서 비봉산 정상까지 2.3km 구간을 운행하는 케이블카로 내륙의 바다 청풍호 주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호수권 관광지 중 가장 아름다운 비경을 자랑하는 비봉산의 절경을 간직하여 한 폭의 수묵화 같은 탁 트인 풍경과 산세로 관광객들의 극찬을 받고 있다. 휠체어만으로도 정상까지 갈 수 있도록 설계하여 노인, 장애인 등 관광약자가 아무 불편 없이 정상에 닿을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 열린 관광지로 인기가 높다.

보은 법주사와 속리산테마파크



속리산 법주사 지점을 시작으로 복천암까지 소나무숲과 계곡, 저수지로 이어지는 세조길을 걸으면 법주사 쌍사자석등, 팔상전 등 3점의 국보와 수십 개의 보물 등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문화재의 보고 법주사를 만날 수 있다.

산세가 아름다운 속리산 자락에 위치한 법주사는 '부처님의 법이 머문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사찰로 속리산의 아름다운 경치와 유서 깊은 역사유적들이 어우러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명승지이다.

일상에 지친 관광객들이 속세를 벗어나 마음에 찌든 때를 잠시나마 벗겨내고 힐링할 수 있으며, 한국 사찰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도 가능하다. 법주사에서 차로 10분 정도 이동하면 속리산의 산세 속에서 다양한 레포츠 체험을



01. 청풍호반 케이블카와 비봉산 전망대
02. 말티재, 말티재 전망대, 속리산 테마파크 모노레일

할 수 있는 속리산 테마파크가 있다. 아름다운 속리산 일원에서 짙라인, 모노레일, 스카이트레일 등 산림 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으며, 모노레일을 타고 말티재 전망대에 오르면 단풍 명소로 유명한 말티재 꼬부랑길인 말티재 열두굽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영동 레인보우 힐링센터



영동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에 위치한 레인보우 힐링센터는 영동의 자연인 빛과 바람, 물과 돌을 모티브로 조성한 관광명소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어린이힐링뮤지엄부터 힐링풋스파, 명상의 연못, 빛의 정원, 릴렉스룸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과일나라테마공원, 영동와인터널 등 힐링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큰 각광을 받고 있다.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단지(블랙스톤 벨포레)



중부권 최대 관광단지로 익스트림 루지, 수상레저, 놀이동산 등의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과 골프장, 리조트, 수영장 등 다양한 휴양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2023년 4월에 초대형 우주테마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 '아트시네마'를 개장하여 아름다운 지구, 달의 바다, 은하계 여행을 주제로 다채로운 미디어아트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스크린을 통해 우주선의 이·착륙을 경험해 볼 수 있는 4D라이더와 플레이 존이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01. 영동힐링센터
02. 블랙스톤 벨포레

만천하스카이워크 & 잔도



만천하스카이워크는 고강도 3중 유리 재질의 U자형 바닥이 남한강 수면 위에서 80~90m에 이르는 절벽에 설치되어 강물을 훤히 보며 하늘길을 걷는 듯한 스틸을 느낄 수 있으며 짙와이어, 알파인코스터 등을 통해 체험까지 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단양의 관광 랜드마크로 유명하다. 단양강 잔도는 상진대교부터 만천하스카이워크까지 1.2km의 산책길이다. 중국 장자제 협곡의 잔도처럼 벼랑에 구멍을 내고 길을 선반처럼 달아서 강의 암벽을 따라 걸으며 주변의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다. 바닥의 물이 훤히 보이는 구간은 관광객들에게 짜릿한 스틸감을 선사한다.



01. 만천하스카이워크, 잔도



In search of Glocal Innovators



글로벌 이노베이터를 찾아서 충청북도 편

한성일(협의회 대학생 서포터즈 18기)

글로벌 김치 수출 기업!
(주)이김 유민 대표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충청북도 김치 업체 대표주자, (주)이킴

(주)이킴은 국내 김치 해외 수출량 3위, 김치 수출 분야에서 8.8% 점유율을 자랑하는 충청북도의 김치 업체이다. 배추의 종자 선정부터 출하 시기, 생육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작업일지 작성까지 엄격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K-Food 김치를 알리고 있는, 글로벌 이노베이터 유민 대표를 만나 김치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킴’의 브랜드 소개

유민 대표는 (주)이킴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진미를 모태로 하여 사업을 운영해 나가던 중 브랜드명 교체에 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제품의 이미지와 부합하고, 가치를 더 빛내줄 수 있는 브랜드명을 찾고자 고심한 끝에 ‘이킴’으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유민 대표가 담아내고 싶은 ‘이킴’ 속 다양한 뜻은 이리하다. 한국에선 익히다의 발음을 따서 ‘이킴’으로, 일본에선 ‘좋다’는 의미의 이이(いい, 良い)를 따서 ‘좋은 김치’라는 의미로, 영어로는 ‘Innovative Idea For Kimch’의 약어인 iikim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사업의 영역을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염두에 두고 ‘이킴’이라는 브랜드명을 결정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해외 수출용에는 진미 때 시작했던 친근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진미’라는 이름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해외 시장을 사로잡은 (주)이킴의 시장 전략, 김치 맛의 현지화

유민 대표는 진미에 재직했던 시절, 본인의 외국어 능력을 십분 활용하여 해외 수출 파트에서 업무 경험을 쌓아 왔다. 2000년대 초반 값싼 중국 김치가 국내 김치 시장에 들어오면서 국내 김치 업체들은 매출이 급감했다. 곧 이어서 겪게 된 기생충 알 김치 파동의 여파로 이킴 역시 김치 수출에 어려움을 겪으며 매출액이 감소하여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유민 대표는 이 시기를 국내 김치 시장이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결정이 쉬운 길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국내외에서 발생한 어려움 속에서 유민 대표가 찾은 해답은 해섭(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으로 김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해외 현지인들의 기호를 파악하여 김치맛의 현지화를 실현시키는 것이었다. 해외 수출 파트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쌓아 왔던 경험과 노하우가 크게 빛을 발하였던 부분이다. 수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 나라의 음식 문화를 접할 수 있었고, 이를 김치에 적용하여 현지에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품으로써 김치를 만들어 내는 일에 집중했다. 그런 결과 일본 시장 내 거의 모든 슈퍼마켓에 이킴의 김치를 입점하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유민 대표는 김치 맛의 현지화에 대한 끝없는 혁신으로 일본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이킴을 만날 수 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왜 충청북도인가? (충청북도와 못난이시리즈)

충청북도는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이다. 도내 대표작물은 복숭아, 사과, 포도, 배추, 고추 등이 있다. 도내 작물 중 배추 재배면적은 약 3,075ha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배추 농산물 대량 수요처인 김치 산업과 지역 농산물 판로를 이어, 기업과 지역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2022년에 배추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못난이 김치 사업을 시작했다. 못난이 브랜드는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품성을 갖춘 완성품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배추를 김치 제조용으로 다듬어 상품 가치를 올리고 그 판로를 개척하여 농가와 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다.

2023년 6월 29일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미국 홈쇼핑 코너를 통해 못난이 김치 생방송 판매를 추진하여 22,588달러(약 3천만 원)의 판매실적을 보였다. (주)이킴 또한 2023년 '어쩌다 못난이 김치' 제조업체로 선정되었다. "버려진 배추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닌, 버려질 뻔한 배추 중 상품화가 가능한 배추를 가지고 선별 후 완전한 상품으로 가공하여 김치를 만드는 것", "브랜드가 못난이일 뿐 완성된 상품은 이킴이 만들고 있는 김치와 다름없는 수준이다", 추가로 "못난이 김치뿐 아니라 가공 이전의 농산물 자체로서 못난이 브랜드 판매를 이어가는 것 또한 좋은 판로가 될 것"이라며 이킴의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애착과 상생의 의지가 담겨 있는 소신을 밝혔다.



건강한 맛, 이킴

(주)이킴 김치는 국내에서 시판되는 김치 중 가장 심심하게 만든다. 해외 시장에서 통할 전략으로 김치 맛의 현지화를 내세웠다면, 국내에서는 건강한 맛을 승부수로 띄웠다. 여성들의 사회 활동 증가로 집에서 김치를 담그는 문화가 줄어들었고, 이는 김치 업체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유민 대표는 무수히 많은 김치 업체들이 생겨났다 없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김치의 맛과 건강을 모두 요구하는 고객들의 니즈에 맞출 김치 혁신에 매진했다. 고정 고객을 확보하고자 꺼낸 전략은 저염·식품 첨가물을 지양한 김치라고 한다. 국내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염김치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주)이킴에서 염도를 0.5도 낮춰서 김치를 만들었다고 한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고, 재료에 대한 철저한 품질 관리와 그간의 기술력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유민 대표는 저염·식품 첨가물을 지양한 김치는 처음 맛보는 고객들은 그 진가를 한 번에 느끼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한다. 시간을 두고 숙성이 될수록 맛의 깊이가 달라지고, 그 가치를 알고 있는 고객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주)이킴의 주력 상품은 배추김치이지만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만든 김치들도 선보이고 있으며 맛도 품질도 우수하다면서 이킴 김치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인구소멸지역과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

(주)이킴은 충청북도 보은군에 위치하고 있다. 이킴공장과 삼승공장이 각각 보은 농공단지과 보은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으며, 김치 제조업체로는 국내에서 큰 규모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보은군은 인구소멸이 타 지역과 견주어 봤을 때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지역민들이 그 지역을 떠나가는 현상은 단순히 지역 인구 감소라는 점에서만 주목할 것이 아니다. 지역의 기업에 일자리가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기업의 운영이 어렵다는 뜻이다.

유민 대표는 "인력난이 심하다. 사람이 없다.", "연봉, 복지혜택 등의 방안을 마련해도 면접은 고사하더라도 지원서 접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인력난에 처해 있는 현 상황을 전했다. (주)이킴의 한국인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55세다. 5년 이내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정년퇴직이 예정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그럼에도 근로자 유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업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김치 가공업과 같은 노동집약적 생산 시설에서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선 자동화 기계를 늘리거나 사람을 늘려야 한다. 이 두 가지 모두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선 인력 수급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현상이 유지된다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또 자동화 기계의 수요가 높지 않으니 이런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도 드물어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는데도 한계가 있다. 기계 설비를 구비해두어도 이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채용되어야 하지만 자격이 있는 근로자 자체가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촌 지역엔 외국인 계절노동자 사업이 있다. 하지만 이 계절노동자 사업의 수혜자는 (주)이킴이 아니다. 이 계절노동자들은 농산물 수확과 같은 1차 산업에는 확실한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킴과 같은 배추 가공식품, 김치를 만드는 2차 가공산업에선 그들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없다. 유민 대표는 “이러한 계절노동자들의 일부라도 2차 가공산업에서도 고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확대되었으면 한다.”라는 정책 제안 의사를 밝혔다.



(보은공장)



(삼승공장)

**(주)이킴의
‘정도’와 ‘약속’**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주)이킴의 정도라고 생각한다.”

유민 대표는 과할 정도로 철저하게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이킴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김치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주)이킴의 ‘정도’ 즉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 유민 대표는 재료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배추의 종자를 선택하고 이 종자를 잘 키워낼 땅을 고르고 매일 배추의 컨디션을 체크하는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최상의 품질을 갖춘 배추를 길러낸다. 이는 타 김치 업체와 분명히 구별되는 운영 방식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배추를 구입해 김치를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대다수 업체의 방식이다. 반면에 (주)이킴은 손끝에서 정성스레 키워낸 배추로 김치를 만들기 때문에 확실한 이력관리가 가능하고, 이렇게 해야만 건강하고 맛있는 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주)이킴의 ‘정도’를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월간 지방시대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인터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유민 대표의 한 마디는 다음과 같다. “매체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 ‘못난이’ 취지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사님께 제안했던 것은 못난이를 ‘김치’ 자체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추를 상품으로 놓고 보았을 때 그 자체에서 응용할 수 있는 못난이 브랜드를 늘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지자체와 지역 업체가 상생의 길을 찾아 현 상황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In case of Glocalism in France



지방시대, 프랑스 편

김형진(협의회 프랑스사무소 선임위원)

2022년 프랑스 출산율 1.80, 그 내막 깊이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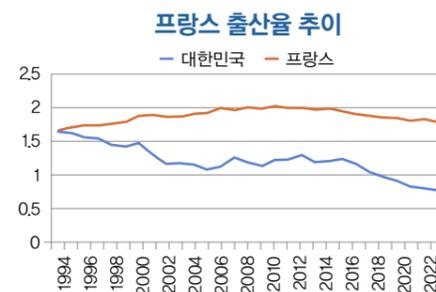
2022년 프랑스 출산율 1.80, 그 내막 깊이 읽기



2010년대 초반 2.03 기록 후 점진적 감소, 출산율 여전히 유럽 선두

프랑스나 우리나라나 출산율을 집계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합계출산율, 즉 여성 1인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출산율 기준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데, 2022년 우리나라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한데 비해 같은 해 프랑스는 1.80명으로 집계되어 두 배 이상의 현격한 격차를 나타냈다.

지난 20년간 프랑스의 출산율 추이를 보면 1994년에만 해도 우리나라 1.66과 유사한 1.68명을 기록했으나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 2.03으로 정점을 찍은 뒤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유럽 국가 가운데 출산율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데, 유럽공동체 27개 회원국 평균 출산율은 1.53명(2021년)이고 독일 1.58, 스페인 1.19, 이탈리아 1.25 등 서유럽 국가가 낮게 집계된 반면, 덴마크 1.72, 루마니아 1.81, 체코 1.83 등 북유럽과 동유럽 일부 국가가 프랑스의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서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프랑스 사례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언론과 사회단체 및 학계에서도 과연 프랑스는 어떤 인구정책을 전개하기에 이토록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최근 수년간 여러모로 분석하고 연구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 출산율 증가와 유지에 직접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정책적인 노력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노력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생활양식의 변화 요인도 출산율 변화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밝혀보고자 한다.

출산과 양육을 돕는 다양한 수당 - 빈부 격차 반영 차등 지원

출산장려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프랑스를 찾는 우리나라 정부나 지자체 방문단이 제일 먼저 주목하는 정책사례는 출산과 양육에 연관된 각종 수당 등 직접적인 지원 시스템이다. 현재 프랑스는 국적과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는 모든 외국인 가정도 포함하여 출산과 양육을 위해 아래와 같은 수당 및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출산 및 양육 관련 수당 및 지원금 현황]

(2023.11월, 파리 거주 가정 기준)

종류	금액	대상/조건
출생(또는 입양) 수당 La prime de naissance ou d'adoption	1,019.40유로 (입양 2,038.81유로)	1회 지급(출산 준비 보조금) 일정 소득 이하(중산층) 가구 대상
기초 수당 L'allocation de base	92.40~184.81유로	매월 지급(출생후 ~ 3세) 가구 소득 반영 차등 지급
가족 수당 Les allocations familiales	35.50~141.99유로	매월 지급(3세 ~ 20세) 2자녀 이상 가구 대상, 소득 반영 차등 지급 (3자녀 이상 시 추가 증가)
다자녀 가족 보조금 Le complément familial	277.23유로	매월 지급(3세 ~ 21세) 3자녀 이상, 일정 소득 이하 가구 대상(자녀수 많아지면 보조금도 증가)
아동교육 병행 지원금 La prestation partagée d'éducation de l'enfant	159.87~428.71유로	매월 지급 자녀 보육위해 휴직 또는 시간축소 등 고용 형태 변경한 부모 대상(소득 반영 차등) 자녀 1명(3세 미만) 6개월간 자녀 2명(3세 미만) 24개월간 3명 이상(6세 미만) 48개월간 (부모 동시 또는 교차 신청 가능)
보육서비스 선택 보조금 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95.71~925.26유로	매월 지급 0~6세 자녀 공립 이외 민간 탁아 및 보육서비스 선택 시 실비 지원 (가계 소득 반영 차등, 실비의 15%는 자부담)
가족 지원 수당 L'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187.24유로 (입양시 249.59유로)	매월 지급(0~20세) 한부모 가정 추가 보조금 (법정 양육비 지원 없을 경우)
개학 수당 L'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398.09~434.61유로	매년 1회(가을학기 개학시) 6~18세 취학아동 대상, 일정소득 이하 가정 지급

기타 장애아 수당, 자녀 간호 수당, 가정폭력 긴급 지원, ... 등 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 다수

프랑스의 직접지원 시스템은 이처럼 상당히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가계의 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이러한 수당들이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삼는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가계별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는 상대적 지원이라는 점이다. 부유한 가정보다는 빈곤층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배려함으로써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프랑스식 사회주의 정신이 반영된 셈이다.

의료, 탁아, 교육 - 아이는 사회가 키운다는 의식의 반영



출산과 관련한 의료서비스는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산부인과 검진과 주기적인 초음파 검사부터 원활한 분만을 위한 출산 전 요가 수업에 이르기까지 임신기간 동안의 제반 의료서비스, 그리고 실제 출산 과정 동안 입원 및 시술 등 모든 의료서비스를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대부분 무료로 제공 받게 된다. 출산에 대한 우선권은 사회적으로 널리 공인되고 있어서 의료시설 뿐만 아니라 지하철이나 마트 등 대중 공간에서도 임산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임산부 우대는 국적을 불문하고 만인에게 적용되어 심지어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출생 이후 아이의 보육 또한 사회 공공의 영역에서 소화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생후 3개월부터 만 3세까지 영아의 탁아는 크레슈(Crèche)라고 부르는 탁아소에서 이루어진다. 시청에서 운영하는 공립 탁아소 이외에도 마이크로 탁아소, 직장 탁아소 등 민간운영 시설이 있고, 학부모 연대 탁아소와 보모집 탁아소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시간당 0.15~3.71유로에 달하는 탁아비용 역시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재정이 곤란한 가정의 경우 앞서 설명한 여러 가지 지원금을 지급 받아 충당하게 된다.

만 3세 이후부터는 공교육에 포함되어, 3~6세 유아는 에콜 마페르넬(Ecole

maternelle)이라 부르는 어린이집에서, 7~11세는 초등학교 Ecole Elémentaire, 12~15세 중학교 Collège, 16~18세 고등학교 Lycée에서 정규 교육을 받게 된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일부 기독교 계열의 사립 교육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공립학교로 운영되고 있어서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방과 후 활동의 경우에도 학교 교사가 진행하는 학습 보충활동, 지자체가 진행하는 취미학교 Centre de loisirs 등 무상 또는 적은 비용(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으로 추가 활동이 가능하다.

대학 역시 국공립이 대다수인 관계로 1년 500유로 내외의 기성회비만 부담할 뿐 교육은 무상에 가깝다. 아울러 대학 입시를 위해 우리나라처럼 별도의 과외수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출생 이후 아이가 자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기까지 부모가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도록 사회에서 아이의 성장을 지원하는 안정적인 공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출산 및 보육 관련 지원금 제도와 공공의료, 공공보육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자료를 통해 소개된 바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도 정부에서 지급하는 부모급여나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및 각종 바우처 통한 의료혜택 등 다양한 지원금 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0세와 1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70만원과 35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내년 2024년부터 100만원과 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고 지자체마다 추가 지원금을 마련하는 등 직접 지원제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원금이 생겨나고 증가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어서 가시적인 효과를 아직 못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원금 증가 추세와는 거꾸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

그렇다면 “현금성 직접지원이나 탁아, 보육 서비스같은 공공정책 개선 이외에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었던 다른 요소는 없는가?”라는 질문 제기해 볼 수 있는데, 최근 프랑스 경제전문 일간지 레제코(Les Echos)지에 도쿄 특파원 얀 루소(Yann Rousseau)가 게재한 2023.4.3.자 기사는 이런 면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출산율 회복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부권사회에 대한 성찰보다 지원금 제도를 선호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정부가 양육지원금을 과감하게 증액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과 함께 지원금으로 인한 반짝 증가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남성중심의 한국사회에 대한 성찰과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선심성 지원금이 출산율을 꾸준히 올려주는 요인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여성의 중요성 부각과 가족에 대한 개념 변화가 함께했기에 가능했다는 의견을 자주 접하게 된다. 다음은 출산장려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우리 연수단이 여러 차례 방문했던 국립가족수당기금(CNAF) 관계자의 견해를 요약한 내용이다.

[CNAF(국립가족수당기금) 관계자 의견]

- 프랑스 출산율은 출산장려 정책 아닌 가족정책의 결과적 산물

엄밀한 의미에서 프랑스는 출산장려 정책을 전개하지 않고 있다. 출생수당, 가족수당, 기본수당 등 출산과 보육을 돕기 위한 여러 지원금이 존재하고 그 덕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출산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출산장려라는 명시적인 목표 하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복지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고 그 결과로 1.8 이 넘는 출산율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여러 종류의 수당과 지원금 명칭 속에도 Famille 즉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 “출산정책” 보다는 “가족정책”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프랑스가 가족정책으로 지출하는 예산이 2019년 630억 유로(약 91조원)에 달하며 이는 GDP 총액의 3.6%에 해당하는 액수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다(참고로 한국은 1.3%임). 그만큼 “가족”에 대해 우선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프랑스에는 여러 유형의 “가족” 개념이 병존하고 있고 가족의 개념을 유연하게 인정하는 것이 출산율 증가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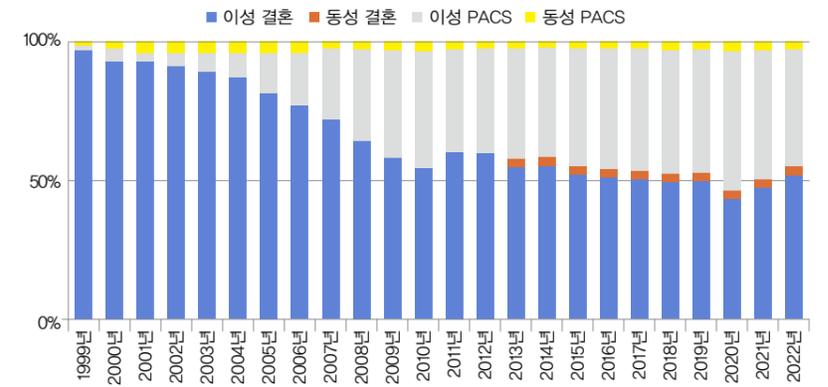
“가족” 개념의 유연성 - 여러 유형의 가족 형태 존중

1999년 프랑스에는 “시민연대 계약(PACS, Pacte civil de solidarité)”을 인정하는 법률안이 가결됨으로써 전통적인 “결혼”과 함께 가족을 구성하는 두 번째 유형의 제도가 생겨난다. PACS(팍스) 즉 시민연대 계약은 두 사람이 시청에서 서명하는 일종의 계약으로 동거와 결혼의 중간 정도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혼인신고와 유사하게 시청에 신고하면 결혼한 부부와 거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된다. 결혼을 하게 되면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라야 되고 만약 이혼하게 될 때 재산분할이나 양육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따져야 해서, 단순하게 시청 신고로 가족 지위를 부여받고 헤어질 때도 시청 신고로 절차가 처리되는 “시민연대 계약”은 기존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실혼 관계 동거 가족을 무겁지 않은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부부 지위를 부여하는 현실적인 제도로 도입 되었다.

아래 도표는 가족 결합을 네가지 유형(이성간 결혼, 동성 결혼, 이성간 시민연대 계약, 동성간 시민연대 계약)으로 분류하여 1999년부터 2022년까지 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이 도표에서도 보듯이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현재까지 전통 결혼과 시민연대 계약은 거의 비슷한 비율의 가족결합 형태로 정착하게 되었다.

프랑스 가족결합 유형별 추이



(출처 : INSEE, 프랑스 국립통계청 / 2018~2022년 잠정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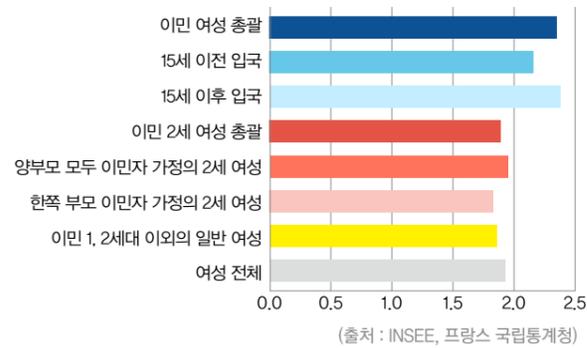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첫 번째 시사점은 “시민 연대계약”이라는 간소화된 가족결합 제도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최초 입법안을 발의한 것은 1990년이고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10년이 걸린 셈인데, 사실혼의 일반화라는 사회 변화를 수용하여 제도를 바꾸는 데는 그만큼의 성찰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증한 셈이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시민 연대계약 제도 도입 이후 프랑스 사회에서는 여러 유형의 가족 형태가 공존하고 있고, 각각의 형태가 오히려 편견 없이 모두 존중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인식도 변화했다는 점이다. 결혼에 의해 결합한 가족, 시민 연대계약 즉 PACS 신고를 한 가족, 편모 또는 편부 한부모 가족, 별도의 신고없이 자유 동거 중인 가족, 이렇게 4가지 유형의 가족이 공존하고 있고 적어도 출산, 육아와 연관된 제반 혜택은 차별 없이 돌아가도록 제도적인 틀을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혼외 출산은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편부 가정의 아동은 주민등록조차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생각할 때 프랑스에서 진행된 가족 개념의 유연한 인식 전환은 그만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프랑스 출산 가운데 63%가 비혼 출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우리나라는 2% 내외),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혼인 기반의 경직된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서 여러 유형의 가족이 있을 수 있다는 유연성을 용인하는 것이 출산율에 얼마나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외국 이민 가정이 출산율 기여 ? - 국수주의적 선입견 영향

프랑스 출산율을 선도하는 계층은 북아프리카 등 개도국 출신의 이민자 가족이라는 의견이 프랑스인 사이에서도 암암리에 언급되고 있다. 실제로 이민자

가정이나 이민 2세의 경우 토착 프랑스인 가정보다 출산율이 높게 집계되는 것은 사실이다. 아래 도표는 2019~2020년 동안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가임기 여성을 이민 1세 및 2세, 비이민 여성으로 구분하여 출산율을 분석한 도표이다.



이민 1세 여성의 출산율은 2.35로 비이민 여성 출산율 1.86보다 다소 높다. 이 경향은 이민 2세 여성의 경우 오히려 역전되어 비이민 여성보다 더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민 여성 모국의 출산율을 함께 비교할 때 오히려 본국의 출산율이 더 높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민 가정, 특히 이민 1세대의 경우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 출신이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출신 국가의 전통과 관습의 영향이 이민 후에도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 일부 극수주의자들 지적처럼 프랑스 복지 혜택을 누리려고 일부러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의견은 지나친 억측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민 여성이 프랑스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위 도표에서처럼 2세대 여성은 오히려 평균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고, 1세대의 경우에도 비이민 여성의 출산율 1.86을 전체 출산율 1.93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지만, 그 차이는 0.07 포인트에 불과하다. 그도 그럴 것이 전체 출산 가운데 이민 여성을 통한 출산은 15% 내외에 해당하며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 Ined에서 여러 차례 분석한 것처럼 이민자를 통한 출산 증대 효과는 0.1% 미만에 머물고 있다.

출산율 - 사회, 직장, 가정의 조화로운 변화의 산물

프랑스가 출산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게 된 데는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탁아, 보육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정책적인 효과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혼인 외에도 여러 유형의 “가족”이 있을 수 있다는 사회의 유연한 수용이 출산에 우호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보육과 직업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직장문화 역시 근본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프랑스에도 육아휴직은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며 기존 자리로 안심하고 복직할 수 있다. 육아 휴직 없이 맞벌이를 지속하는 부모의 경우에도 탁아에 대한 고충과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직장 문화가 잘 정착해 있다.

여기서 한가지 일화를 더 언급하자면, 탁아 및 보육시설을 방문한 우리 지자체 연수단이 탁아소 운영시간이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라는 설명을 듣고, 급하게 야근이 생기면 맡길 수 있는 야간 탁아 서비스는 없는지 궁금해 했고, 탁아소 관계자는 아기 돌보미나 친지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했는데, 급하게 야근이 생기는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이었다. 프랑스 기업에도 물론 야근이 존재한다. 그런데 야근을 하는 직종은 고급 엔지니어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거나 지자체의 경우 정무직과 고위직 간부 공무원 등 주로 사회를 지휘하는 간부급 종사자가 많으며, 일반직 종사자는 노동시간을 엄격히 지키고 있어서 야근이 거의 없거나 아주 드물게 하게 된다는 추가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아침, 저녁 탁아소에 아이를 맡기고 찾으러 가는 사람은 엄마만큼이나 아빠도 많으며, 양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는 노력은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제도적 지원이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프랑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공공의 직접지원 이외에도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나 남성과 여성이 함께 분담하는 양육 풍토, 출산이나 양육이 직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안정감 등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아동수당을 늘리고 탁아소를 확충하는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사회와 가족, 생활양식의 변화 요소를 균형있게 반영하는 노력이 병행하여 진행될 때 지속가능하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풍토가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In case of Glocalism in Sweden



지방시대, 스웨덴 편

한인숙(협회 스웨덴 자문위원)

스웨덴의 출산 지원 정책

스웨덴의 출산 지원 정책

스웨덴 인구 현황

2022년 기준 스웨덴의 인구증가율은 전년 대비 0.79%이며 2022년 합계출산율은 1.52명으로 한국(0.78명)의 2배에 달하고 있다.

OECD 국가별 합계출산율을 2020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 0.84명, 스웨덴 1.66명으로 OECD 평균 1.59 명에 비해 높은 편이다.

OECD 국가 간의 저출산 대응 비교는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중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으며 OECD 주요국의 합계출산율은 GDP 대비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중이 클수록 높고, 적을수록 낮았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2019년 기준 OECD 국가의 GDP 대비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중은 평균 2.29%였는데, 스웨덴의 경우 3% 대로 높았고, 한국은 1.56%로 낮았다. 국가 합계 현금 서비스 세제혜택 부분에서도 스웨덴 3.4%, 한국 1.56%(OECD 평균 2.29%) 스웨덴의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중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이다.



스웨덴의 가족정책

스웨덴 가족정책의 목표는 모든 가정에 대해 보다 나은 삶의 환경 제공하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취약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고용상의 성차별을 해소하며 가정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출산휴가를 육아휴직으로 대체한 최초의 국가로 파트너에게 양도가 안 되는 아버지 휴가(Paternity Leave) 90일을 실시하고 있으며 출생 또는 입양 시 추가로 10일간 사용 가능한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

출산·육아휴직 제도

출산 휴가 기간 중 월 급여의 80%를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출산 전후 산모 동반, 입양자 간 친밀성 강화를 위해 추가로 10일이 더 부여되며 쌍둥이 출산 시 20일, 세쌍둥이 출산 시 30일 사용 가능하다

자녀 입양의 경우는 부부가 반씩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입양아 경우도 일반 자녀 출생 시와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임신급여(Pregnancy Benefit/Graviditetspenning)

임신 중 육체노동 불가 시 60일 전부터 50일간 지급한다. 휴가 기간 중 월 급여의 80%, 일일 한도액 709크로나(70유로) 가 지불되며 출산·육아휴직 480일 중에서 공제된다.



출산 10일 전 출산 준비 부모수당

출산 후 육아휴직(ParentalBenefit/Föräldrapenning)이 지급되는데 부부가 함께 이용 시 480일간의 부모 수당을 지불한다. 소득에 따라 390일은 상병수당, 나머지 90일은 최저 수준 급여로 지불되며 단독 양육자일 경우 480일 중 390일은 상병수당, 나머지 90일은 최저 수준으로 지불한다. 복수 자녀 시 각 자녀에 대한 부모 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아동 병간호 휴가(Temporary Parental Benefit)

1-12세 자녀 병간호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월 급여의 80%, 최대 120일 사용 가능하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세 미만 자녀 병원 입원 시
- 12~16세 특별한 경우
- 16세 이상 장애자 자녀의 경우 21세까지 병간호 휴가 사용 가능



양육 관련 각종 수당 제도

기본 아동수당(Basic Child Allowance): 0세부터 16세까지 매월 1인당 1,250크로나(110유로)를 면세로 지급한다.

연장 아동수당(Extended Child Allowance): 16세 이상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급한다.

다자녀 가족 보조금(Large Family Supplement): 자녀 수에 따라 150크로나 씩 누진적으로 증가한다.

아동보호수당(Care Allowance): 장애 또는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의 자녀 병간호가 필요한 경우 출생부터 1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병간호수당 및 부대비용을 합쳐 연간 8,010크로나를 초과할 시에는 일정 부분의 세금 면제도 가능하다.

장애아동수당 간병수당(Assistance Compensation for Children): 기능 장애, 심각한 어려움으로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280크로나(25유로)를 지급한다.

자동차수당(Car Allowance for Children):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아동 부모에게 차량 구매 또는 개조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소 9년 이상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량 구매에 최대 60,000크로나(740만원)를 지원한다.

아동연금(Child Pension): 부모 사망 시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학교 재학 중인 경우 20세까지 지급한다. 사망자 연금자산 기준으로 형제와 균등 배분한다.

주거수당(Housing Allowance):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또는 28세 이하 청년 부부에게 주택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유 또는 임차 중인 주택 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한다. 금액은 소득, 자녀 수, 주택 정보에 따라 산정된다.

입양수당(Adoption Allowance): 외국에서 10세 이하 자녀 입양 시 세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해야하며 자녀당 4만 크로나(3,500유로)를 지급한다.



아동 보육 및 돌봄 제도

유치원(pre school)

1~5세 아동 대상으로 유아원과 유치원을 통합하여 교육하며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Play Edu를 기초로 국립교육청의 교육 방침 및 교과 과정에 따라 교육하고 있다. 대부분 13개월 이상 유아들이 이용하며 개원 시간은 06:30~18:30 이다. 출산휴가를 마친 부모들의 회사 복귀를 위해 약 90% 이상이 참가하고 있으며 무상 교육은 아니지만 부모 부담 최소화를 위한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다. 또한 3~5세 아동 경우 주당 15시간, 연 525시간 무료 보육을 받을 수 있다.



개방 유치원 (open pre school)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이나 출산휴가를 보내고 있는 부모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Drop in 형식으로 사전 등록 필요 없이 짧은 시간 동안 자유롭게 방문하여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유치원과 별개 시설로 학교별 운영시간이 상이하며 1일 약 5시간 정도 오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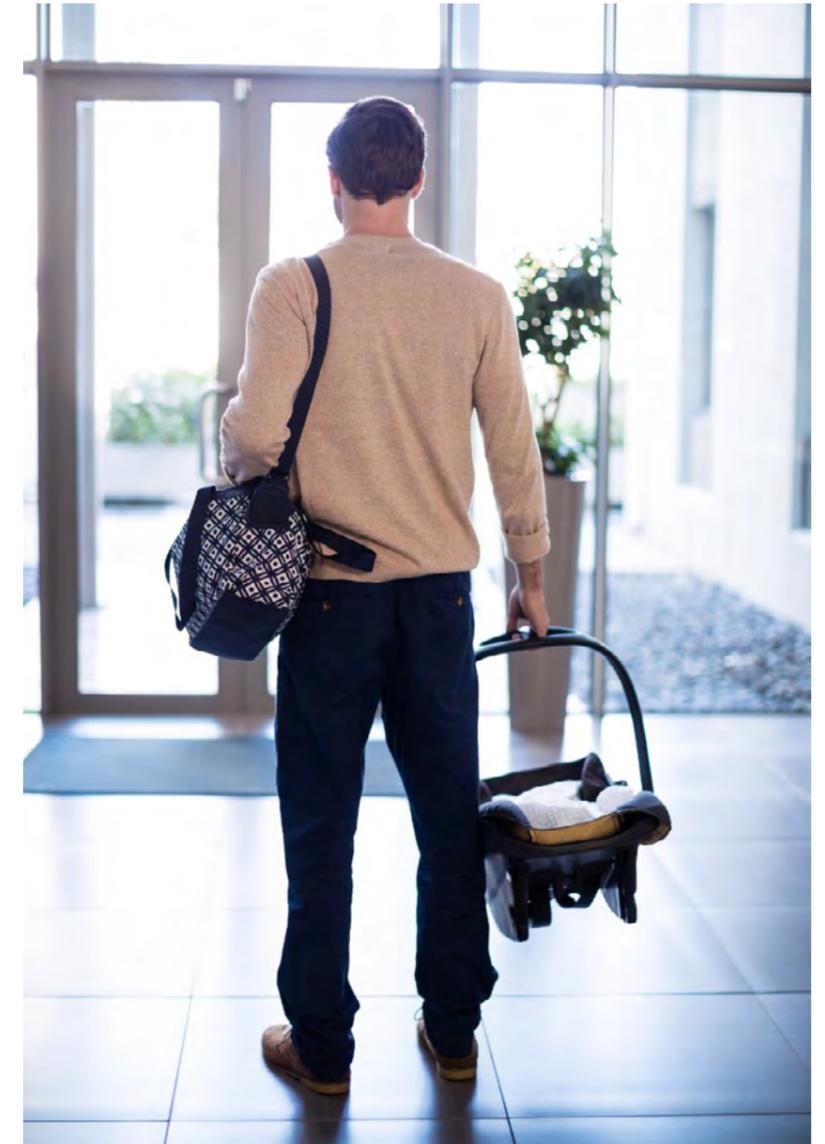
취학 전 학급 (F Class)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종전 유치원 교육을 초등학교에 통합시킨 1학년 준비 과정으로서 무료로 제공한다. 일반 초등학교에 속하며 0 학년이라고 불린다.

방과 후 학교 (Fritis)

1~12세 아동을 위한 방과 후 학교, 여가활동센터로 6-12세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부모가 취업 또는 학업으로 수업 전후에 돌보지 못할 경우 이용한다.

6-9세를 위한 시설은 방과 후 학교라 불리며 10-12세를 위한 시설은 여가활동센터라고 한다. 교육, 놀이, 숙제 도움 등을 제공하고 여가교육 전공자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무상 교육은 아니지만 대도시의 경우 90% 이상의 아동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출처>

Försäkringakassa 스웨덴국립보험청 www.forsakringskassan.se
 SCB 국립 통계청 www.scb.se
 스톡홀름대학교 인구 통계학 연구소 www.suda.se



지방시대, 중앙정부 정책동향

이우정 연구위원(협의회 정책연구센터)
박관규 센터장(협의회 정책연구센터)

2024년에 변화하는 조세정책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7월 28일~8월 11일)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국회(9월 1일)에 제출하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30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¹⁾ 세법의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2023년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은 첫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투자·고용 지원, 둘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 부담 완화, 셋째, 미래 대비를 위한 인구·지역 등 구조적 위기 극복 그리고 끝으로 납세 편의 및 형평 제고를 위한 납세자 친화적 환경과 세입기반 확대이다. 본 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수정·의결한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2024년부터 변화하는 조세정책을 소개한다.

2024년 조세정책의 기본 방향

이번 조세관련 법률개정안은 크게 네 가지 방향, 즉 경제활력제고, 민생경제회복, 미래대비 그리고 납세 편의 및 형평제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글에서는 앞의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경제활력 제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고용 촉진, 기업경쟁력 제고, 창업·벤처 활성화 방안 등을 위한 세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데, 기존의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각각 15%, 20%, 30%로 크게 조정하였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세액감면을 확대하는데, 기존의 완전 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복귀할 때 현재는 5년 동안 100%, 2년 동안 50% 감면하는 것을 각각 2년과 1년씩 연장하여 7년 동안 100%, 3년 동안 50%로 확대하였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업종요건을 당초 정부안에서는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였는데, 국회 심의를 통해 법률로 규정하도록 변경하였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업승계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였다. 예를 들어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정부안에서는 20년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15년으로 수정되었다. 그리고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정부안에서는 300억 원으로 설정하였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120억 원으로 하향·수정하였다.

또한,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법인세

감면을 신설하였는데,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하도록 하였다.

- ▶ 영상콘텐츠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현행) 대 3%, 중견 7%, 중소 10% → (기재위 수정) 대 15%, 중견 20%, 중소 30%
- ▶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현행) 5년 → (정부안) 20년 → (수정) 15년
- ▶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
(현행) 60억원 → (정부안) 300억원 → (수정) 120억원
- ▶ 평화경제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신설
(신설) 3년 100%, 추가 2년 50% 감면

〈표 1〉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1. 경제활력 제고	
투자고용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기업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 완화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시기 조정
창업벤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발명금 비과세 한도 상향 •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법인 세액공제 등 신설 • 기술 혁신형 M&A 요건 완화

자료 : 기획재정부(2023).

민생경제 회복

다른 하나의 조세정책 방향은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민과 중산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대표적으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으로 상향하였다.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상환방식에 따라 기존 300만원~1,800만원에서 600만원~2,0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의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반려동물이 자주 걸리는 질병에 대해서는 진료비에 부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첫째,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둘째 가입 후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의 60% 이상 납입하는 경우), 납입한도를 2배(840만원 → 1,680만원)까지 허용하도록 개정하였다.

1) 15개 조세관련 법률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표 2〉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2. 민생경제 회복	
서민·중산층 부담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신설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 특례 연장

자료 : 기획재정부(2023).

미래대비

인구·지역 등 구조적 위기극복을 위해 출산·양육, 청년자산형성으로 노후대비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여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였다. 혼인 증여 재산 공제를 신설하여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억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자녀 장려금 대상은 소득상한 금액을 기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최대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된 것은 다음과 같다. 자녀세액공제액을 확대하고 공제 대상에 손자녀를 추가하였다. 공제세액은 기존의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이 각각 15만원, 30만원, 30만원에서 15만원, 35만원, 35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표 3〉 미래대비를 위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3. 미래 대비	
결혼출산양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의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청년자산형성 노후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등 비과세 적용 연장 ·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지역균형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자료 : 기획재정부(2023).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이번 조세관련 법률개정안은 윤석열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를 담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 위해 설정하는 특별구역이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조세지원의 내용은 〈표 4〉과 같이 다양하다. 특히

세제지원은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투자 이행 및 경영활동 등 지방투자의 전 단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양도세, 상속세,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등과 연관되어 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기회발전특구 관련한 세제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최근 국회 심의 후 과세특례 제도가 추가되었다.

우선,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하여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법인세 감면(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을 신설하였다. 이는 일부 다른 특구에 비해 100% 감면 기간이 2년 추가된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²⁾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표 4〉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 주요 내용

세제지원 항목	주요내용
소득·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 ·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 (5년 100% + 2년 50% 감면)
취득세·재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구로 기업 이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 · 특구 내 창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수도권)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3년 100% + 2년 50% 감면 · 공장 신·증설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5년 75%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5년 35% 감면
개발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부담금 100% 감면
상속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구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3).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 2023년 세법개정안. 2023년 7월 27일.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2023년 11월 30일.
- 산업자원부 보도자료(2023). 지방투자 핵심거점으로 기회발전특구 본격 육성. 2023년 10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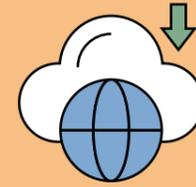
2)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에 따르면 위기지역은 5년 100%+2년 50%, 농공단지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5년 50%이다. 그리고 3년 100%+2년 50% 감면 지역은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지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이다. 2023 세법 개정에 따라 적용기간이 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월간 지방시대 설문조사 이벤트

2023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웹진 「월간 지방시대」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웹진을 만들기 위한 구독자님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응답을 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구글폼 접속



설문조사 작성 후 제출

1. 설문조사 구글폼에 접속한다. (<https://forms.gle/nHfUmLKYYuAu8Dx6>)
2. 설문조사 문항에 응답 후 제출한다.
3. 당첨자가 발표되는 월간 지방시대 1월호를 기다린다.

당첨 확률을 높이는 꿀팁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블로그 이웃을 맺고
이웃 인증 시 당첨 확률 UP!



※ 블로그 이웃 인증 시
이웃 이름을
기재해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gaoksns>

< 이벤트 참여 유의사항 >

- ※ 1인 1회 참여 가능하며 다중 참여 적발시 안내 없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여 경품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발송이 불가합니다.
- ※ 경품 품절 시 동일 가격대의 다른 상품으로 안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당첨자는 당첨 발표까지 월간 지방시대 구독을 유지해야 하며 구독을 취소 시 안내 없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2023년 12월 11일(월) ~ 2023년 12월 31일(일)

당첨자 발표 2024년 1월 10일(수)
※ 월간 지방시대 1월호 내 당첨자 발표 페이지

이벤트 경품

 도미노피자 슈퍼디럭스+콜라 (5명)	 BBQ 황금올리브 치킨+콜라 (10명)		
 배스킨라빈스 베라이어티팩(10명)	 버거킹 오퍼세트(15명)	 투스뎀플레이스 떠먹는 스트로베리케익(25명)	 메가커피 아메리카노(150명)

신규 구독 이벤트 당첨자 발표

스타벅스 카페라테(50명)

강 * 윤(2884)	박 * 용(6682)	정 * 라(1064)	이 * 주(1461)	이 * 진(8947)	이 * 순(6273)	박 * 영(8897)
신 * 희(8052)	서 * 호(2114)	강 * 준(8336)	김 * 나(2852)	장 * 일(3395)	유 * 영(8256)	허 * 린(9157)
편 * 성(4299)	최 * 길(4246)	이 * 진(8151)	김 * 정(7111)	신 * 수(6620)	김 * 린(5634)	
양 * 우(8115)	정 * 섭(7625)	이 * 애(1980)	장 * 화(4869)	공 * 영(2792)	민 * 철(0364)	
김 * 민(3791)	고 * 은(8470)	박 * 인(5946)	장 * 타(1674)	안 * 범(0960)	조 * 준(0891)	
김 * 용(4845)	차 * 숙(8495)	경 * 숙(5703)	최 * 주(6667)	한 * 훈(2320)	차 * 용(2864)	
김 * 영(5296)	이 * 준(2431)	정 * 천(5774)	조 * 비(6012)	김 * 해(4509)	김 * 정(7665)	
김 * 민(6928)	김 * 민(5881)	이 * 훈(6690)	이 * 영(2709)	이 * 훈(5522)	권 * 규(2435)	

편집후기

월간 지방시대는 시도지사가 생각하는 지방시대란 무엇인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며, 지방시대를 위해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례 및 지방시대의 토대를 닦고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인물을 찾아 소개한다. 또한 타 국가의 최신 정보 및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정책동향을 시의성 있게 제공하고 있다.

2023년 12월호는 '충청북도' 편으로 구성, 제작되었다.

『시도지사의 지방시대 칼럼』은 충청북도지사의 지방시대에 대한 철학과 고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본다.

『지방시대 정책우수사례』로는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세계 배터리 산업의 중심 충북, 사통발달 철도교통의 중심 충북 의료비 후불제 시행,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1등 충북, 추억공유 영상 자서전 어쩌다 못난이 김치, 충북형 도시어부에 대한 추진전략을 소개한다. 『충청북도의 주요정보』에서는 청남대, 중앙탑 사적공원과 탄금호 무지개길, 제천 청풍호반 케이블카, 보은 법주사와 속리산 테마파크, 영동 레인보우 힐링센터를 홍보하고, 『글로벌 이노베이터를 찾아서』는 해외 시장을 사로잡은 글로벌 김치 수출기업인 ㈜이킴의 유민 대표를 인터뷰 하였다.

『지방시대 해외정보』는 프랑스와 스웨덴의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실는다.

마지막으로 『지방시대, 중앙정부 정책동향』은 “2024년 변화하는 주요 조세정책”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월간 지방시대는 시도지사와 시도의 홍보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 매월 특정시도의 특별판으로 기획되어 시도, 국회, 중앙정부, 국민 등에게 제공된다.

2024년 1월호는 “부산광역시”편으로 제작된다.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



발행일 2023년 12월 11일(제112호)

발행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철우 | 편집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홍보미디어부

주소 03186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 문의 02-2170-6092